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황태의 눈

문화칼럼

군복 단속 유감



김 어 준 <뜨지일보총수>

이런 수준의 생각이 국방위, 법사위를 다 패스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해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되었다. 만세.

1. 국방부가 지난 18일에 일반인의 군복 및 군용장구 착용소지규제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착용, 휴대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된다고 한다. 참, 재밌다.
2. 첫 번째 재밌는 점. '군인들은 휴가기간에 사복을 입을 수 없다'는 식으로 군의 복장을 통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 일반의 복장을 통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국방부는 무슨 권함과 배정으로 국민 일반의 복식취향을 자신들이 구속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 군복에 대한 지적재산권 주장일까. 다음, 그 입법목적. 군인을 사칭한 총기탈취나 군과 관련한 중대범죄를 차단하는 목적이 있는 거라면, 국민 일반의 일상을 제약하려 들 것이 아니라 군 기강을 바로 잡아 해결할 일이다. 군이 일반의 편의와 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제약하려면, 일반의 권리 제약 이외에는 군이 목적하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방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 선행 검증도 없이 군의 요구로 일반의 이익은 유보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병영국가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군복 입으면 10만원 벌금 내게 하는 것으로 군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제 총기를 탈취하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일상에서 군복을 입으면 10만원 벌금 낸다는 규정으로 인해 총기탈취계획을 포기라도 한다는 건가. 예외규정으로 "진짜 군복을 입었다더라 머리 가 길어서 군인으로 보이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 한다. 해병대 전우회 역시 예외다. 하, 재밌다. 총기탈취는 스포츠머리로! 군범죄는 해병대 변장으로! 또한 밀리터리 룩에 대해서는 관참으나 '진짜 군복과 구별하기 어려운 옷'은 안 된다. 여성부는 군 경험 없어 진짜 진짜 구분하기 힘든 여성들의 법외보호를 위해 밀리터리룩 안 내테스크의 국방부 설치를 강력 요구할 일이다. 국민들이 때로 작업복이든 패션의 일부로든 나름의 이유로 군용 복장을 착용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국방에 어떤 현저한 위협이 되는 건지도 애초 이해하기 힘들지만 설혹 알 수 없는 어떤 위협이 잠재한다 하더라도 이 법률로 인해 그런 류의 위협이 도대체 어떻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길, 없다.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의 복장에 개입할 수 있다 여기는 건, 군복 입고 민간인들 사이 섞여 있으면 외국관광객들 위압감을 느끼니 군인들은 영외에서 항상 사복만 착용하라고 '군

인들의 군복 및 군용장구 영외 착용소지규제 금지에 관한 법률'을 문공부가 제정하는 것과 '다 이다'로 유행이다. "진짜 군인임에도 군인으로 보이지 않는 문선대 외모면 문제 삼지 않을 것", "잘 다녀서 진짜 군복처럼 안 보이고 밀리터리룩으로 보이면 관참다", "잘 다린 기준은 지역 세타스 주인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조항만큼 코메디고. "사문화된 기준 군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반인들의 밀리터리룩 착용을 합법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시킨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 또한 참으로 재밌다. 언제부터 국방부가 패션을 허가하는 부처가 됐는지 모르겠다만 스스로 이미 사문화됐던 법이라면서 필 다시 완화하. 하지만 진정 코믹한 건 국방부가 아니라 국회다. 이런 수준의 생각이 국방위, 법사위를 다 패스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해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되었다. 만세.
3. 덕분에 깨닫는 것도 있긴 하다. 국회의원 아저씨들 정말, 잘 뽑아야겠구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경제보다 법원칙” 검찰 선택 최선이었나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장고(長考) 끝에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나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경제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인 정회장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검찰 수뇌부와 일선 수사감사들의 고심에 찬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현대차 비중과 원고(高)·고유가의 이종고를 겪고 있는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구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세계 자동차시장은 지금 사상 유례없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처를 호소하는 각계의 탄원이 봇물을 이룬 것도 현대차가 글로벌 틈5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검찰 간부들이 "국민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최고의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에 대한 일련의 불구속 수사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 검찰은 지난 해 장구구 교수사건을 계기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재계는 이번 사건을 정도 경영 정장의 전기가 삼아야 한다. 투명 경영을 강화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오너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내고 계열사를 멋대로 운영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마땅하다. 국민들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거액의 사회 현금으로 무마하려는 대기업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 있다.

與 국정원 수사권 폐지추진, 신중히 다루라

열린우리당이 가동해온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하게 됐다. 개혁안을 보면 국정원법 제 3조(직무)의 3 규정, 즉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개혁안은 뿐만아니라 수사가 아닌 정보수집활동에도 제한을 가하자는 내용도 담고있다. 정보수집은 허용하되 '정치활동 관여를 위한 정보수집'은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자는 것이다. 우리는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국정원의 권위주의의 시절 어두운 그림자를 지나치게 의식한 소치가 아닌가 우려한다. 개혁안을 낸 임종인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이 많았고, 위헌소지도 있다"고 재언설명을 하 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그의 화병이 과거형이듯, '국가정보원' 시절 이후 이 조직이 옹공조작을 하고 정치인들을 협박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당사자인 국정원은 필적 뿔뿔 우려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복잡 단단한 구조상 정보수집과 수사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란과 외환죄에 해당하는 국내의 동향에 대한 수사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관한 기능을 스스로 잘라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령, 긴장이 날로 더해가는 한일관계에 대해 국정원이 양국 정치인 관련 사안이라고 활동을 접는다면, 한미 FTA나 주한미군 문제로 모종의 음모가 진행될 때 수사에 손발이 묶인다면 그 결과로 초래되는 불행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정원은 지금 대부분의 역량을 국내 첨단기술 유출방지외 6·15 이후 대북관계 조율에 쏟고 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려 애쓰는 조직에 고각삼우(矯角戩牛)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당은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김 수 공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론 식습관 형성을 통해 국민 전체의 식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식생활은 국내 농업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농업의 장래와 식량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학교급식이 이제는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700만 명이나 되는 학생이 성장기 12년 동안 매일 한끼 이상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학교급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 운영되면서 새 시대의 주역인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선택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해

학교급식!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돼야

제고기 선행해야 한다. 셋째 급식재료 공급은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만들되, 지자체 단위의 모범사례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주시의 경우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연합사업단과 공동으로 나주관내 전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한편, 23개학교에 농·수산물 등 전 품목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넷째 원활한 급식재료 공급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열악한 지자체 예산이지만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생산자단체를 선임해 소요경비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급식 지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학부모·생산자·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필요하다. 학교급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자치기구는 물론 정부가 당연하게 책임져야 할 몫이다. 전남농협에서는 2005년 61개 지역농협이 참여해 1천263개 학교에 209억원의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70개 농협에서 1천300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포함, 3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남 총 급식비 820억원 대비 37%에 해당한다. 이전의 신도불이 운동이 농업에서 소비자(단체)와 학교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균일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 생산자와 계약재매 및 직거래를 통한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식재료를 규격화·표준화해 공급자와 학교간 신뢰성

여론조사 빙자한 불법 선거 운동 근절해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 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는 일도 생겼다. 여론조사는 선거구민들의 여론 형성과 여론조사에 기여하는 면이 크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미리 지지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절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수준 미달의 조사기관이 텃밭을 일삼고, 지지율이 인위적 방법으로 조작됐다는 시비가 일어나서는 혼란만 부추긴다. 여론 조사는 정확도가 생명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편향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형수·광주시 북구 통합동

기 고



이 덕 수

올해 전남도의 사회복지예산이 8천8백억원으로 1조원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도 전체예산 3조 8억원의 23%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불과 4~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규모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우리 도 예산의 중심은 사회 간접자본시설 투자에 집중되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숨고름 뜬도 없이 친환경농업육성, 투자유치, 관광산업의 육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만 보고 내 달려지 않았나 싶다. 그 사이 사회적 위험(노령·질병·재해·빈곤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는 국민복지기본선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복지행

복지예산 1조원 시대

정도 도민을 위해 24시간 쉼 없이 쉼 없는 복지예산의 규모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복지예산에 전남도의 지방세 부담률이 69.4%로 이는 우리지역에서 걸어 들인 세금 대부분을 전국 시도 중 복지예산에 제일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사실도 전남도가 주민복지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지 알게 해준다. 이같은 복지예산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도민에게 많은 혜택을 준 반면에 그만큼 민중들이 부담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전남지역은 노인 인구 층이 전체 도민의 15.6%로 전국 제일가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노동력의 저하

애완견 안고 운전, 타인 생명까지 위협한다

플게이트에 근무하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운전하거나 핸들위까지 올려놓고 운전하는 운전자를 종종 본다. 요즘 계산을 할려고 할 때 애완견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를 질러대면 근무중에 깜짝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모든 차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 等 鼓

'행운의 편지'라는 게 있었다. '이 편지와 같은 내용을 적어 20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섬뜩한 내용 때문에 주변 친구가 방에 몰래 넣던 추억을 당시엔 기억하는가? 확장시절 적잖은 곤혹감을 안겨줬던 '행운의 편지'는 '70·80 세대'라면 누구나 한번쯤 받았을 것이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행운의 편지'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 문자 메시지를 20명에게 보내면 중간고사 대비된다' 안 보내면 '망함'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행운의 편지'가 휴대전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엄지족'에게 문자메시지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부적(符籍)'이다. 부적(talisman)은 약귀를 쫓거나 복을 가져오기 위해 몸에 지니는 주술 도구다. 아픈 곳에 붙이거나 불태워 마시고, 몸에 지니기도 한다. 신라인들의 경우 '처용(處容)의 화상'을 문에 붙여 귀신을 쫓았다고 일연(一然)은 '삼국유사'

디지털 符籍



(三國遺事)에 적었다. 요즘 신세대들은 절집이 아닌,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부적을 주고 받는다. 공짜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www.horoom.com)도 등장했다. 4월 마지막 주의 'TOP 10'엔 '중간고사 대비는 부적' '짜사랑 성공 부적' '첫사랑 성공시키는 부적' '바람 방지 부적' '다이어트 부적' '자신감이 생기는 부적' '여행안전 부적' '미팅·소개팅 부적' '성적 향상 부적' '취업 성공 부적'이 순위에 올랐다. 어떤 포털에선 동음 이차(同音異字) 부적도 내놓았다. '腥骸海潮(날림해류)' '海魚底羅(해어저라)' '道羅瓦(돌아와)' 등등이다. 부적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영험이 있는 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내 재능의 부적(符籍)은 천재성이 아니라 연습'이라고 했던, 모짜르트(Wolfgang Amadeus Mozart)의 말이 다시금 생각난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